

Online Series

2016. 01. 20. | CO 16-04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양안관계 변화와 동북아 정세 전망

신중호(통일정책연구실장)

2016년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56.1%의 득표율로 집권 국민당(國民黨)의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이 대만경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 따른 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권이 견지해 온 친중국 노선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민진당이 전통적으로 대만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강조하고 독립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양안(兩岸)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양안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영향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 교체 요인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당 마잉주 총통 재임 8년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2008년 취임한 마잉주 총통은 대만경제의 부흥을 목표로 연평균 6%대 경제성장과 4년내에 실업률 3% 등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만의 경제침체는 지속되었고 급기야

2014년에는 수출이 10% 이상 줄어들고 경제성장률 역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만경제의 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수출액의 40%, 해외직접투자의 60%가 중국에 집중되었고, 청년실업률도 13%대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국민당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대만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었고, 차이잉원이 이끄는 민진당이 주장한 정권심판론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전체 의석의 60.1%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심각한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대만내에서 ‘대만인’ 정체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기여했다. 대만 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들이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92년 17.6%에서 2015년 59%로 급증한 반면,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92년 25.5%에서 2015년 3.3%로 급감했다. 이처럼 대만인들의 정체성이 갈수록 중국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젊은층의 반중 정서 역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만 대학생들은 2014년 3월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여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해바라기’ 운동을 전개했고, 같은 해 9월에 홍콩에서 발생했던 ‘우산혁명’ 역시 대만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번 총통 선거 직전에도 한국에서 활동중인 걸그룹 멤버인 쯔위(周子瑜)의 대만기(旗) 사건이 발생하자 대만 젊은이들의 반중 감정은 더욱 들끓었고 차이잉원의 총통 당선에 영향을 주었다.

많은 대만인들이 ‘독립’이나 ‘통일’ 보다는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차이잉원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 대만 정치대학 선거여론센터의 201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들은 ‘통일’이나 ‘독립’보다는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안관계의 ‘현상유지 후 재결정’을 선호하는 대만인이 34.6%로 가장 많고, ‘영원한 현상유지’가 24.9%에 달했다. 반면, ‘현상유지 상태에서 독립 지향’은 16.4%, ‘현상유지 상태에서 통일 지향’은 7.4%에 불과했다. 또한 ‘가능한 빠른 통일’을 원하는 대만인은 1.7%에 불과했고, ‘가능한 빠른 독립’을 선호하는 대만인 역시 4.7%에 불과했다. 차이잉원이 이끄는 민진당은 이와 같은 대만인들의 ‘현상유지’ 선호 현상을 적극 반영하여 총통 선거 기간 동안 중국본토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평화와 안정’ 및 투명한 양안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양안관계 전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양안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으나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국민당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전면적 3통(通商, 通航, 通郵)을 실현했고, 2010년에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2015년 10월에는 마잉주 총통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통해 ‘92컨센서스(九二共識)’에 기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양안 적대상태 해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중국과 대만은 1992년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상호 동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가 구두(口头)로 한다”는 ‘92컨센서스’에 합의했고, 이에 의거하여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 직후에도 소위 ‘92컨센서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중국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과 외교부 성명 및 관영 언론매체 등을 통해 민진당의 독립 시도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안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5월 20일 공식 출범하는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권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위해 기존의 교류협력 추세는 유지하겠지만, 대만경제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차이잉원의 민진당이 추구하는 양안관계의 변화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총통 당선 확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대만의 민주제도, 국가정체성, 국제적 입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선거 전날 발생한 ‘쯔위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만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가 국가 정체성 문제와 연계될 경우 양안관계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다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안 간 갈등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대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약 40%가 중국인이고, 약 150여만 개의 대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국민당 마잉주 정권의 친중국 노선을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안 간 평화롭고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2000년 집권한 민진당 천수이벤(陳水扁) 총통 시절 급진적인 대만독립 추진으로 인해 양안관계가 긴장을 경험했던 상황을 회피하면서도, 최근 양안 간 교류협력의 추세를 거스르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양안관계가 긴장이 고조될 경우 대만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이잉원 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일정 기간의 긴장과 갈등 국면을 지나면 다시 협력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 대만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 대만내부의 빈부격차 및 실업률, 대만의 대미·대일 관계 강화,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포함한 미일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초하여 대만문제를 자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포함한 관계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에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양안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 직후 미국이 윌리엄 번스(W. Burns) 전 국무부 부장관을 특사 자격으로 대만에 급파하여 미국과 대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안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차이잉원 정권이 미국과 관계 강화를 시도할 경우 향후 미중관계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일본과의 우의를 강조하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友日·南進)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친중 성향의 국민당 정권보다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민진당 정권을 더 선호한다. 이를 반영하여 차이잉원 총통 당선 직후 일본 외무상은 축하 인사와 함께 대만과 일본이 가치관을 공유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정부는 대만의 TPP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 중재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했다.

대만이 미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인도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낮추고 자신들의 국제 활동 공간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권이 미국과의 협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중미 간 갈등 국면이 출현할 수 있고 이는 곧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중국과 대만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교류협력 경험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 통일·통합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임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단국인 남북한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성급한 양안 경제통합 추진으로 인해 대만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가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남북한관계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수혜가 아닌 양측 모두에게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교류협력 구조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양안관계는 오랫동안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한 역시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는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선순환적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만 젊은이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양안 간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